

테마칼럼

이성체제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칼럼

DJ 정치재개의 3가지 전제조건



김행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 현(주)넥스투 투자 고문>

“ 훗날 역사가 기록하는 DJ는 남북화해를 이룬 햇볕정책의 창시자, 동서화합을 이룬 화합의 전도사, 개혁-진보진영을 지켜낸 정치투사여야 한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숨 쉬는 것조차 정치활동으로 평가되는 명실공이 '정치9단'이다. 그런 그가 정치권의 중앙으로 다시 돌아왔다. 퇴임 후 처음으로 고향인 목포를 방문하자, 노대통령이 득달같이 사저로 알현했다. 당사 '상왕정치'라는 말이 나왔다. 두 인물 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정확치 않다. 온갖 설이 분분할 뿐이다. 40대 0으로 선거에 전패한 후, 열린우리당의 해체 가능성에 위기감을 느낀 노대통령과 '햇볕정책'을 유지하고 통치기간 중의 각종 소문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DJ가 범여권결집 및 정권재창출에 뜻을 함께 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가하면 노대통령이 DJ에 대한 각종 정보를 토대로 그의 정치활동 재개를 막기 위해 협박을 했다는 전혀 상반된 말들도 흘러나오고 있다. 때문에 둘은 긴장관계라는 것이다. 진실이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다.

①지역주의 극복 열정 다하라

다만, DJ는 최근 '실패한 왕은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앞뒤 모를 듯한 말을 했고, 노대통령은 28일 목포를 방문할 예정이다. 여하튼 'DJ-노무현의 만남' 이후 백가쟁명식 범여권 정계 개편 논의는 일단 수면 하로 잠복했다. 분명 뉘가 잇기는 있는가 보다. 연대를 갈등이든. 사실 DJ의 정치활동 재개는 예고된 수순이

있다. 그는 부인할 수 없는 한국정치의 대주주 중 한 사람이다. 강력한 지역기반과 여전히 그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한 그는 현재진행형 정치인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전총재나 YS, JP와는 다른 존재다. 게다가 그는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육십 많은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를 단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을 걸어 그의 정치활동 재개를 막기에는 명분도 약하고 가능한 일도 아니다.

②진보·개혁 순수성 지키라

때문에 기왕에 다시 시작될 DJ의 정치활동에 '3가지 조건'을 달고 싶다. 첫째는 동서화합을 통한 지역주의 극복에 마지막 열정을 바쳐달라는 것이다. 그의 움직임은 자칫 호남을 고립시키고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범여권 신당을 '도로 평민당'으로 만들고 말 위험성이 농후하다. 둘째는 당장의 정권재창출에 눈이 먼 마구잡이식 통합이 아니라 현정 이후 면면히 역사를 이어 온 진보-개혁세력의 순수성을 지키는 통합을 이뤄내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한나라당과 맞설 수 있는 보수-진보의 양대 산맥이 솟아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발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는 말라는 것이다. 큰 틀만 마련해 주면 된다. 그 틀 안에서 차세대들

이들 정치인들이 치열한 이념과 권력투쟁 가운데 새로운 정치리더로 부상할 수 있도록 밀거물이 되라는 것이다.

③전면에 나서지는 말라

정치는 결국 명분싸움이다. 동서화합과 진보 개혁세력의 재정립, 새로운 리더쉽과 정치질서의 구축에 그 한 몸을 바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팔순이 넘은 노경에게 이 같은 역할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만도 감사한 일 아닌가. 그러나 본인이 욕심을 부리면 이견 필립이다. 본인의 안전을 앞세우면 전횡터의 장수가 될 수 없다. 본인만이 아니라 군중까지도 전멸하는 길이다. DJ가 존경한다는 이순신장군이 그랬듯 '살려면 죽고, 죽으려면 사는(生即死 死即生)' 법이다. 그가 만일 노육에 눈이 멀어 개인의 이익을 지키고 정치보복으로부터의 안전만을 피하는 교토삼굴(狡兔三窟)식의 정치적 공수를 꾀한다면 역사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훗날 역사가 기록하는 DJ는 남북화해를 이룬 햇볕정책의 창시자, 동서화합을 이룬 화합의 전도사, 개혁-진보진영을 지켜낸 정치투사여야 한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상규

인터넷과 첨단과학의 발달로 현대는 하루하루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다. 위에서 지구로 향해 발사되는 전파를 이용해 텔레비전을 거리에서 시청하고, 세계각지에 있는 사람들과 화상으로 전화 통화할 수 있는 시대이다. 그리고 어떤 특정 관심거리에 대한 여론과 관심도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각지의 많은 사람들과 공유 할 수 있게 되어 실로 정보화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낀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금융이나 부동산, 증권 혹은 의학 정보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인터넷 검색창에 자신이 알고 싶어 하는 검색어를 써넣고 여러 사람들의 조

을 남비하는 경우가 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육체적 장애가 남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병원에서는 권리와 주장을 잘 피력하는 환자나 보호자도 때로는 이런 황당한 사비비 진료와 치료로 피해를 보았지만 땀땀하게 자기 목소리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웰빙'(Well-Being)이라는 단어가 요새 유행하면서 특정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 혹은 건강식품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포장돼 인터넷 사이트를 비롯한 갖가지 매체를 통해 무차별로 광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나서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

인터넷 의료정보에 현혹되지 말라

언을 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의 맹점은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를 걸러주는 과정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가 마치 진짜 인양 행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의학 정보의 경우는 믿을 만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정보가 아니면 100% 신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관을 사칭하는 무수무수 질한 연구소 혹은 센터란 이름으로 설립자나 운영진이 불분명한 사이트, 운영진을 정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경력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곳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특정 의료기구나 상품을 광고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의료정보는 더욱 조심해서 취사선택 해야 한다. 환자들 중 다급한 심정으로 주위의 권유나 혹은 잘못된 광고를 의료정보로 오인하여 비과학적인 치료로 시간과 돈

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육체적 장애가 남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병원에서는 권리와 주장을 잘 피력하는 환자나 보호자도 때로는 이런 황당한 사비비 진료와 치료로 피해를 보았지만 땀땀하게 자기 목소리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웰빙'(Well-Being)이라는 단어가 요새 유행하면서 특정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 혹은 건강식품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포장돼 인터넷 사이트를 비롯한 갖가지 매체를 통해 무차별로 광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나서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

<광주우리들병원 원장>

신문 유머코너에 '성적 농담' 실려서야

신문은 아이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신문은 훌륭한 교육(NIE)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훌륭한 교과서다. 그런데 최근 아이들에게 해로운 유머나 이야기가 인터넷 유머라는 이름으로 실리는 경우가 있다. 얼마전 인터넷 유머 코너 중 '영글한 할머니'라는 게 실렸다. 강도가 가정집에 침입했는데 훔쳐갈 다른 물건은 없고, 금가락지를 한 할머니가 보이자 그거라도 훔쳐오라고 할머니에게 "이리와 보세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잘 팔릴까 모르겠네, 해 본지가 하도 오래 돼서"라고 했다는 유머다. 이는 할머니도 성폭행을 바란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가정집에 음담패설에 가까운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일반 신문에 인터넷 유머라는 이름으로 자주 실리게 문제다. 신문이 청소년들에게 영동한 해악을 주는 기구로 변하지 않도록 이런 내용을 실을 때는 신중하게 선택해주시기 바란다. ▲이영애·광주시 복지 문홍동

기고



김병주

지난 해 말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주요 대학들이 2008년부터 시행하는 대학별 고사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중·고등학교 현장에는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주요 대학들이 제시한 새로운 논술의 개념인 '통합교과형 논술', '다면사고형 논술', '수리논술', '과학논술' 등에 대하여서는 현명한 대응은커녕 정확한 이해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통합형 논술의 도입취지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암기를 통한 결과적 지식보다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및 중시하는 것. 둘째, 교과목 개개의 과정에 갇힌 교육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교

과 구조적 방법과 지침은 무엇일까? 즉, 사고력을 함양시키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영역 전이적 응용력을 키워줄 수 있는 글쓰기 지도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비판적 사고를 통한 독해와 작문이 통합형 논술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비판적 사고는 반성적사고(reflective thinking)이며, 이는 사고에 대한 사고(thinking about thinking)라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문제해결적사고(problem solving thinking)로 통하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별 글쓰기 프로그램의 골격(Step-up Writing Program 'SWP')

통합교과형 논술, 알고 준비하자

과목간 의사소통의 고정을 중시하는 것. 셋째, 주입식 교육에서 자기 주도적 교육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서울대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인재선발'을 위한 것이며, 창의성의 토대를 교과목간 열린 과정을 통해 통합적 사고력의 배양을 추구하고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감안할 때 향후 통합형 논술의 형태는 고등학교 전 과정의 교과서가 논술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교재이며, 논술 주제는 국어나 작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과목에 걸쳐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통합형 논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

를 말할 수 있는데, 현재 대입에서 실시되는 논술은 시나 소설을 쓰는 것과는 달리 완전한 창작은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주제 논제에 관한 일련의 텍스트나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를 근거로 주장, 견해, 기존견해의 새로운 해석, 비평하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통합형논술 교육중심은 기존의 텍스트나 정보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평가, 이해가 필수적이다. 즉 올바른 텍스트 읽기를 전제로 읽기와 쓰기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실습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말해 1단계 : 요약(Summary), 2단계 : 논평(Comment), 3단계 : 논술(Essay)의 각각의 단계에서 'SWP'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예반무어스론 논술연구소장>

잡지 부록 규제 기준 만들어 독자 피해 없애야

얼마전 여성지를 사러 서점에 갔더니 평소 6천 8백원하던 월간 여성지가 12월호는 9천800원을 받았다. 왜 이렇게 비싼가 유심히 살펴 보았더니 가계부·다이어리·캘린더 등 부록을 몇개 끼워주면서 가격을 3천원이나 올려버렸다. 특정 여성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월간여성지들이 마치 담합이나 한 것처럼 '일시 특가 9천800원'으로 값을 정했다. 자신들만의 입장과 이익을 추구한 불지각한 담합행위가 아닐 수 없다. 부록은 어디까지나 잡지에 부수적으로 덧붙여주는 것이므로 그것 때문에 값을 올려

받아서 안 된다. 연말 특별부록을 끼워주는 것은 잡지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한 출판사의 흥분 및 판매수단이기 때문에 부록값을 추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또 연말 부록이라도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것들이었다. 굳이 부록가격을 따로 받으려면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만 살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부록값을 받지 않고 평소 가격대로 판매하는 것이 옳은 상도덕이 아닐까. 공정거래위원회나 관계당국에서는 잡지출판물 부록에 관한 기준을 시급히 설정해 규제방안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명연·광주시 서구 유충동

시설

불법·폭력·과격시위 이대로는 안 된다

지난 22일 광주시청 앞을 비롯한 일부 시가지는 폭력시위와 불법적인 가두 행진으로 얼룩졌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광주시청 진입을 시도하며 유리창을 깨고 시민의 재산을 파손하는 등 난장판을 벌였다. 평화적 집회를 바라던 시민들의 기대를 철저히 무너뜨린 것이다. 집회는 농민화와 광주경찰서, 민주노총 등 10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 1만2천여명이 참가했다. 주최측은 평화적 시위를 약속했지만 불협화음과 폭동, 최파이프가 난무하고 경찰 방패와 진입봉 등을 빼앗아 불태웠다. 호남고속도로가 접거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집회 전 '준법시위'를 약속한 주최측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특히 시위대가 박광태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경찰과 충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한·미 FTA와 광주시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농민들의 절

박한 심정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정부와 대통령을 겨냥해야 할 시위가 엉뚱하게 광주시청 진입으로 변하며 폭력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시위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반응은 국무총리 산하 '평화적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집회·시위 행태에 대해 '폭력적'이란 답변이 81.2%였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도 72.6%에 달했다. 응답자 82.5%는 불협화음으로 '교통체증'을 꼽았다. 질서유지 위반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로 압도적이었다. 시대가 변했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진 만큼 불법·폭력시위는 근절해야 한다. 불법·폭력시위는 역효과만 낼 뿐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불법시위에 보다 엄정히 대처하고 평화 및 준법시위 정착을 위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농민들의 절

'지준율' 전격 인상 부작용 최소화해야

한국은행이 23일 지급준비율을 5%에서 7%로 전격 상향조정 했다. 한국은행이 거의 사문화되고 사라진 지급준비율 인상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16년 만에 꺼낸 것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어떻게든 폭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인 것이다. 지준율이 인상되면 은행은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가되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집값 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준율 인상은 점차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서민들이 대부분 실수요자들은 앞으로 은행 대출받기가 어려워 뿐만

아니라 이자 부담도 커져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 자금력과 신용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역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뻔하다. 자금력이 있는 투기세력보다는 오히려 서민이나 중소기업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시 대출 앞선을 해주는 지방 주택업계로서도 지준율 인상이 수요 위축과 분양 악화로 이어져 더욱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는 자칫 금리 인상 이상으로 지방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반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서민 및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준율 인상폭과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내수와 투자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無等鼓

항구도시 '목포 8경' 중엔 '유산기업' (龜山奇蹟)과 '용당귀범'(龍塘歸帆)이 있다. 유달산의 기묘한 바위와 용머리를 돌아오는 뱃단배라는 뜻이다. 목포시는 지난 95년, 그 정경과 아름다운 정취를 살리기 위해 조망권(眺望權·prospect right)을 도시계획에 적용했다. 배를 타고 들어올 때 유달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주도로 아래 6층 이상 건물 신축을 제한한 것이다. 그 이듬해엔 해안도로변을 따라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 유달산에서 내항(內港)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권리로 마련했다. 유달산 조망권 도입은 광주·전남 도시계획사에 뚜렷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자

발과 아픔을 감내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자본과 권력에 굴절됐던 도시계획사의 새 장을, 港都 木浦가 '빛나게' 열었다. 최근 무등산 자락에 신축 중인 광주운림동 K아파트를 놓고 맞은 편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 문제를 들고 나섰다. 기존 입주민의 조망권을 위협하는 것은 '법' 이전에 도덕적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 공사중지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조망권의 법적 규정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지난 2004년 광주운암동 롯데아파트 층수를 11층으로 제한한 연환경에 대한 '개념상'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첫 수용 했기 때문이다. 도시의 미래와 환경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해발 229m의 나지막한 골산(骨山)은 지금쯤 잿빛 콘크리트 건물로 가려졌을 것이다. 당시 광주일보는 그 의미를 어떻게 평가했다. <木浦시의 의회는 그러나, 이런 반



무등산 조망권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